



현안 정책토론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 및 통상외교 강화방안

2024. 11. 19. 화 14:30, 국회 본청 245호

좌장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패널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진동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

개회사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

기조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사말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축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여의도연구원

CONTENTS

- 개요 / 1

- MAGA 시대 한국 외교안보의 핵심과제와 정책 방향 / 3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 / 13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 트럼프 2기 출범 평가와 대응 방향 / 21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미국 대선 이후 한미동맹 및 경제외교 강화방안 / 29
(김진동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통상외교 대응방안 / 37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 및 통상외교 강화방안

■ 개요

- 주제: [현안 정책토론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 및 통상외교 강화방안
- 일시: 2024. 11. 19.(화) 14:30 ~ 16:00
- 장소: 국회 본청 245호
- 주최: (재)여의도연구원
- 참석자
 - 좌장: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 패널: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진동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

■ 계획안

시간		일정
14:30 ~ 14:35	5'	○ 개회 및 국민의례
14:35 ~ 15:00	25'	○ 개회사: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 ○ 기조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인사말: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 축 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 내빈 소개 및 사진촬영
15:00 ~ 16:00	60'	○ 자유토론 ○ Q&A

[현안 정책토론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 및 통상외교 강화방안

MAGA 시대

한국 외교안보의 핵심과제와 정책 방향

남 성 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MAGA 시대 한국 외교안보의 핵심과제와 정책 방향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1. 대선의 승패는 경제 이슈

미국 대선 당일인 11월 5일자 조간인 뉴욕타임즈 1면 오피니언에 게재된 글을 보고 트럼프의 당선을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제목은 ‘이기든 지든 트럼프는 이미 승자다(Win or lose, Trump has already won)’였다. 미국 시사잡지 콤팩트(Compact)의 편집장인 매튜 스미츠는 무역과 이민문제에 대한 트럼프의 정책이 상당한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승패에 관계없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미국인들의 팍팍한 살림살이를 개선하는데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는 진보성향의 뉴욕타임즈 입장에서도 매튜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는 판단인 것 같았다. 자유무역과 불법이민이 미국 사회의 핵심 화두라는 점을 지적한 것은 주목할만 했다. 트럼프의 이례적 압승으로 그의 주장이 정확하게 미국의 현실을 반영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트럼프즘은 이제 미국의 뉴노멀이 되었다.

그는 세계화와 자유무역주의에 따라 저임금 국가에서 생산한 물건을 수입해서 싸게 소비했지만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았다고 강조했다. 감당할 수 없는 불법 이민자들의 수용은 한계에 도달했다. 심지어 불법 이민자들의 2세대조차 후속 불법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미국에서 일하는 아들, 딸 및 지인들과 통화할 때마다 코로나 기간을 지나며 물가가 너무 올랐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연봉 10만불을 받아도 대도시의 높은 주거비와 식비를 지불하면 지갑은 어느새 빈털터리가 된다. 외식의 경우 3인 식사를 하면 높아진 팁 때문에 항상 4인의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당국이 코로나 보조금으로 돈을 헬리콥터로 살포하다시피 한 결과다. 금년도 전반기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5천불을 넘어섰지만 3억 3천만 인구 중에서 30% 내외로 추산되는 서민들의 삶은 만만치 않다. 일자리는 있지만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쓸 돈이 없다.

높은 물가에 밀려드는 불법이민자와 자유무역에 지쳐버린 중하위층과 백인 저소득층은 트럼프의 귀환을 선택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economy, stupid.)’라는 과거 클린턴 대통령의 구호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은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가 결정적인 선택의 기준이었다. 막말 논란,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유권자를 제외하고는

부차적인 이슈였다.

이번 선거가 지난 4년 바이든 정부에 대한 평가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부통령이었던 해리스 후보로서는 현직의 프리미엄보다는 유권자들의 불만을 달래기에 어려움이 컸다. 미국 사회가 여전히 여성 정치인에게는 유리천장의 벽이 있다는 것도 해리스 후보에게는 핸디캡이었다. 남녀를 구분하는 낙태권 등 젠더 이슈만으로 백악관에 입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돈의, 돈에 의한, 돈을 위한 동맹(Alliance of the money, by the money, for the money)’을 강조하는 트럼프가 불사조처럼 살아왔다. 깊은 동맹(deep alliance)의 시대는 가고 거래 동맹(easy alliance) 시대가 도래했다. 상호거래에 따른 이득의 관점에서 한미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트럼프 후보와 통화하고 협력관계를 이어가자고 했지만 동상이몽은 불가피하다.

2. MAGA 2기 외교안보 정책 전망

1) 바이든 지우기 정책(ABB)

불사조 트럼프가 귀환했다. 그의 정책은 바이든 정부 정책 지우기(ABB: Anything but Biden)가 될 것이다. 개입주의(engagement)보다는 극단적이고 편협한 고립주의(narrow-minded isolation)로 회귀하면서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세계 경찰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종료된다. 미국의 전통적인 국제질서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구호에 걸맞게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한다. 그는 지난 7월 19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후보 지명 수락 연설을 통해 중국을 포함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자동차 및 기타 제조업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다. 기후변화 협약 탈퇴 등 국제협약은 중요하지 않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을 현 행정부가 일으켰다고 비난하며, 모든 국제적 위기를 종식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지금 유럽과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만, 한국, 필리핀, 그리고 아시아 전역에 분쟁의 유령이 떠오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 트럼프는 자신이 재임 시절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잘 지냈고” 그의 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자랑했다. 그는 “지금 북한은 다시 도발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만, 나는 김 위원장과 잘 지내고 있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도 내가 돌아오면 보고 싶어 할 것이다”라고 말해 지지자들의 웃음과 박수를 이끌어냈다.

모든 국내 및 외교안보 공약이 바이든 정부의 정책과는 결이 다르다. 황야의 무법자 카우보

이처럼 모든 현행 정책에 칼질이 들어갈 것이다.

2)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는 외교안보 공약 : Zero base approach

가. 안보 불확실성 심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트럼프 당선으로 한미동맹 조약(since 1953)이 체결된 이후 가장 심각한 도전과 시련기가 다가올 것이다. 그의 대외 정책은 예측 불가능성으로 기존 틀을 흔들어 놓을 것이다. 동맹국들은 그의 일방적인 주장과 정책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 카드는 대한(對韓) 정책에서 트럼프의 전가보도가 될 것이다. 미 국방수권법 차원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항목이 있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주둔 미군에 대한 개인적 철학과 신념, 지난 1기에 지속적인 주장에도 참모들에 의해 완수하지 못했던 부분을 미완의 과제처럼 인식할 수 있다. 충성파들로 채워진 2기 트럼프 행정부 각료들은 경쟁적으로 MAGA 정책을 추진해서 트럼프의 신임을 얻으려고 할 것이다.

또한, 의회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여 주한미군 철수 관련 법안 개정이 가능하며, 행정명령을 통해 철수, 감축 등을 포함한 상징적·실질적 조치를 할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

그는 ▲국익을 위해 파리 기후변화협정, 유네스코 등 여러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며, 미국의 주권을 강조한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통해 중국몽을 견제하고, 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강경한 입장이다.¹⁾ ▲이란 핵협정 탈퇴와 이스라엘 지지를 선언했다.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외교 복원 의지도 시사했다. 그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이고, 오늘 김정은이 한국으로 가는 철도를 폭파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는 큰일이며, 한국은 러시아나 중국 등과 단절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남북이 도로를 통한 육로 왕래는 실현된 적이 없는데도 이를 한국의 고립처럼 표현한 것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 후보는 소셜미디어에서도 북한의 철도와 도로 폭파를 언급하며 “오직 트럼프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GDP 대비 3.5% 방위비 인상

트럼프 당선자는 ▲동맹국과의 관계 재조정으로 NATO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을 강하게 요구한다. 방위비를 내지 않으면 보호하지 않겠다고 경고한다. 미국의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

1) 차기 국무장관으로 유력한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58)은 중국에 대한 강경 노선 및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등을 강조한다.

해 동맹국의 방위비를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

NATO 국가들의 방위비를 GDP의 3% 선까지 인상을 요구하여 독일이 반발하는 등 동맹국과의 갈등은 불가피하다.²⁾ 그는 2020년 한국의 방위비를 연 10억달러에서 50억달러 선으로 인상을 요구했다. 트럼프 2기에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거론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지난 9월 일본이 최근 방위비를 크게 올렸다고 하며 한국도 미국처럼 GDP의 3~3.5%를 방위비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10월 15일 자신이 재임 중이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13조원)를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가 언급한 연간 100억 달러는 한국이 2026년 이후 지불할 액수의 9배 가까운 액수다. 한미는 10월 초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는 내용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문안을 타결했다.

※ “그들은 머니 머신(They are Money Machine)”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으로 예상되는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9월 26일 미국기업연구소(AEI) 대담에서도 “한국의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5%인데, 미국처럼 3%~3.5%까지 올라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국인 한국에 매우 헌신적이며 과거에 한 일을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내 생각에 한국 내 우려의 일부는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측근이자 국무장관 후보들 중 하나로 거론되는 빌 헤더티 상원의원은 11월 9일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서 군사적 기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 북핵 군축 협상: nuclear parity approach

가치동맹(deep alliance)보다는 동맹관계를 거래로 인식하는 트럼프는 북핵 문제에서 기존의 비핵화 입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지난 30년간 동맹국들은 북한을 통제하지 못한 만큼 북핵 협상을 위해 제재 완화를 검토해야 하며 한국 정부는 좀 더 폭넓은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인계철선 역할을 바꿀 시점이나 아직은 한국 자체의 핵

2) 차기 국가안보보좌관(NSC)으로는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대사(58)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유럽 주요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 등을 외친다. 그는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한 8월 18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보호를 받고 싶으면 돈을 지불하라”고 압박했다. 올 3월 팟캐스트에서도 “미국에는 강인한(tough) 수석 외교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무장을 말할 단계는 아니라는 급진적인 정책 전환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2기 국방정책 보고서를 총괄 집필하고 차기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미 국방장관 대행은 “미북 간 군축 협상이 안될 건 뭘가, 북핵은 호리병을 빠져나온 지니(genie out of battle)”라고 표현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는 결이 다른 이야기를 주장한다.³⁾

트럼프 당선자는 북한 김정은과 직거래 회담을 통해서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핵동결에 합의하는 스몰딜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9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북한은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한 것도 북핵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반영한 발언이다. 워싱턴의 기류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친한파 공화당 의원들이나 보수 연구소(think thank)에서 부분비핵화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희망적 사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라. 미중 갈등과 동북아의 긴장

트럼프가 동맹 부담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대중 견제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가 대중 고관세 조치를 단행하고 첨단 기술 분야의 경쟁을 심화하면 바이든 정부의 디리스크잉(derisking)으로 수사적으로나마 완화된 듯 보였던 탈동조화(decoupling) 기조가 다시 강화될 것이다.

트럼프는 대중 견제에서 한국을 비롯한 주요 관련국들의 동참을 요구할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과 핵협의그룹(NCG)을 북한이 아닌 대중(對中) 견제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병력 이동을 통해 대만 방어에 나설 수 있다. NCG와 같이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성과를 희석하는 차원에서 그 기능을 중국 견제 중심으로 재편하거나 아예 NCG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고비용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바. 미국의 고립주의 외교와 국제분쟁의 현상 동결

트럼프는 유세기간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탓으로 돌렸다. 미 대선을 코앞에 둔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승리 계획’에 국제사회 지지를 호소하며 바빠 움직였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선동했다”며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푸틴이 트럼프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다’는 민주당 측 비판에 반박했다.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노르트스트림2’ 제재한 것을 두고는 “러시아가 지금까지 한 가장 큰 일을 끝내버렸다”고 했다.

3) 아프가니스탄 미군 병력 감축 등 트럼프 후보의 요구 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

트럼프는 10월 17일 공개된 보수 성향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그(젤렌스키 대통령)는 전쟁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패배자”라고 말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쟁이 지금까지 이어진 데 대한 책임이 우크라이나에 있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뒷받침한 것이다.

그는 그동안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 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그는 푸틴 대통령과의 친분을 종종 과시하거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멈추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21세기 중국과 전쟁을 어떻게 피할 것이냐’는 질문에 “중국에 대해서도 확실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우리가 (중국과 전쟁을) 한다면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며 그들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지금) 그 계획을 알려줄 수 없다”며 “미리 알려주면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해리스 부통령이 휴전 촉구와 이스라엘 지지로 줄타기를 하는 사이, 트럼프는 이스라엘 전폭 지지로 차별화를 시도했다. 미국 정치·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대계 표심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내 유대계와 아랍계 유권자를 향한 두 후보 간 득표 전략도 치열했었다. 아랍계 미 유권자들의 민심 이반이 뼈아픈 해리스로선 이스라엘을 마냥 압박할 수도, 지지할 수도 없는 딜레마를 보여주었다. 미국의 고립주의 외교에서 예외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한 지원이 될 것이다.

10월 12일 공개된 월스트리트저널(WSJ)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7개 주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대응에 있어, 해리스 부통령을 50% 대 39%로 앞섰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더 잘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48%로 해리스 부통령 33%를 앞섰다.

사. 트럼프, 푸틴·김정은 브로맨스

트럼프의 당선으로 ‘트럼프-푸틴-김정은’ 3각 라인이 형성될 가능성이 짙어졌다. 한국이 이 3각 구도에서 ‘패싱’(투명인간 취급)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동맹을 압박해온 반면 권위주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친근감을 표시해왔다.

트럼프는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에서 피격 후 처음으로 열린 유세에서 북한 독재자 김정은과 잘 지낸 것이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등 전세계 독재자들과의 관계에 대해 자랑했다. AFP와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로이터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잘 지냈다면 9월 13일 자신을 겨냥한 암살 미수 사건 후 시 주석에게서 “아름다운 편지(note)”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트럼프는 “나는 시 주석과 매우 잘 지냈다”며 “그는 대단한 사람이다. (시 주석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듣고 며칠 전에 나에게 아름다운 편지를 썼다”고 말했다. 공화당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동맹들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동맹이 우리를 이용해왔다. 소위 우리의 동맹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그렇게 했다”고 날을 세우면서도 오르반 총리가 마러라고 회동에서 자신을 칭찬한 것을 자랑했고 김 위원장과의 잘 지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대선전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약함’을 비판하는 소재로도 스트롱맨들을 ‘활용’하고 있다. 그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푸틴 대통령, 시 주석을 거론하며 “바이든은 그들을 한 번도 압도하지 못했다”면서 “그는 국제적 망신이고, 세계의 지도자들은 그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3. 맺는말 : 강한 국력과 스마트한 외교로 트럼프즘 파고 넘어야

한국은 북러 군사 밀착 속에서 커지는 ‘트럼프 리스크’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기존 한미동맹의 기조와는 결이 다른 흐름이 예상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던 4년 전 최대 화두가 미중 전략경쟁이었다면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 반미 전선과의 관계 개선 및 압박이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정책 혼선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확장억제, 원자력협정 개정 및 통상 등 모든 현안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는 시나리오도 검토해야 한다.

우선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 공조 수준을 높여야 한다. 한미 양측은 북한의 핵 고도화를 최대한 저지해야만 하고, 적극적인 국제협력을 견인하는 데 뜻을 모으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북핵 고도화 무용론에 대한 전략적 메시지를 북한에게 지속적으로 주지시켜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도 주한미군 주둔과 미국의 확장억제는 전혀 변화가 없음을 모색해야 한다.

다음은 대한민국 안보의 레드라인을 정확하게 설정하여 미국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비용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과 더불어 북한이 아닌 중국에 대한 군사적 대응 차원에서 평가해 왔다.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부차관보 등 소위 트럼프 측근들도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언급해왔다.

지난 7년간 북한의 핵능력도 증가했지만,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서 동맹국인 한국의 전략적 가치도 전례 없이 높아졌다. 트럼프는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미국의 국익을 증가시킬 카드가 다양해졌다. 트럼프와 그의 외교 안보팀에서 북한이 아닌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도 동맹 관리에 과감하게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

셋째, 미북 핵군축 협상에 대비한 확고한 대응 원칙이 필요하다. 북한이 군축 협상에 적극적인 가능성이 높은 바, 확고한 원칙 하에 한미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핵무장을 위한 다양한 준비도 마련해야 한다. 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 당시와 같이 폐연료봉 재처리를 위한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한미 간의 전략적 소통과 대화도 시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러·우전쟁 이후의 한반도 안보 지형 변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러·우 전쟁 파병이 한반도 안보 및 통일 추진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합리적 전망과 실효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러·북 간 공군 및 해군력 분야 협력, 러시아 중고 핵추진 잠수함 대북 제공, 전쟁 이후 러시아 방공망 북한 임시 배치, 북한 해군기지 러시아 활용, 러·북 합동 군사훈련 등의 분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처럼 북한에 러시아 군사력 일부가 배치되고, 양국 간 핵무기 고도화 기술 협력이 순조롭게 전개되는 시나리오도 검토될 수 있으며 이는 한반도 안정 및 우리의 자유 통일추진에 큰 장애가 될 것이다.⁴⁾

트럼프 당선자는 조선업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을 요청했지만 아마 한국의 방위비 인상분으로 비용을 부담시킬 것이다. 조약 체결 72주년을 맞는 내년 을사년(乙巳年)은 새로운 한미관계의 원년이 될 것이다. 한국의 외교 안보를 미국의 배려에 만 의탁할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초격차 기술의 우위와 냉정한 외교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자강불식(自強不息)이 필수적이다. 대한민국의 국력 신장만이 트럼프의 존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해외 분쟁 불개입과 자국 우선주의, 극단적 보호무역과 미국 내 생산 압박 이슈가 커지면서 한국은 보다 심각한 외교적 과제를 안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트럼프 2기는 냉엄한 국제정치의 흐름 하에서 한국의 국익 확보에 차가운 겨울이 올 수도 있다(cold winter is coming)는 점을 예고한다. 우리의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강력하고 세심하며 노련한 스마트 외교가 필요하다.

4)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트럼프의 귀환과 한반도: 시사점과 대응 방향, 2024-11-06, 정성윤, 김민성, 백승준.

[현안 정책토론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 및 통상외교 강화방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

박 인 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I. 한국의 국가정체성과 한미동맹

1. 한미동맹의 기원과 전개

- 한국전쟁 휴전과 함께 체결된 현재의 한미동맹은 1953년 10월 미국에서 체결되었고, 1954년부터 효력이 발생되었음.
- 당시 한국은 북한의 침공으로 인해 생존적 위협을 느꼈고, 한미동맹은 한국 안보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담당하게 됨.
- 2차 대전 이후 대부분의 동맹관계는 ‘강대국-약소국’ 간 사이에서 체결되었는데, 한미동맹 역시 전형적인 힘의 비대칭성을 전제로 출발했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의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역량은 증대했고, 결과적으로 현재에 와서는 미국이 맺은 약 40여개 동맹 관계 중에서 가장 성공한 동맹 모델로 평가됨.

2. 한미동맹의 포괄적 성격

- 한미동맹이 체결되던 최초 시점에는 군사동맹적 성격이 강했고, 세월이 흐르면서 한미동맹은 군사 영역은 물론, 경제, 사회, 과학기술 등 모든 정책 영역에서 긍정적 효과를 서로 공유하는 포괄적인 성격으로 발전했음.
- 특히 2023년 4월 당시 ‘한미동맹 70주년’ 한미 정상 간 공동성명을 통해, 현재 국제사회가 처한 모든 현안을 함께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천명함.

3. 한국의 글로벌 지위와 한미동맹

- 한미동맹 70년의 성과는 한국이 보인 지금까지의 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했음. 특히, 한국은 아시아 50여개 국가 중에서, 근대 국가의 두 가지 목표인, 경제 성장과 정치민주화를 모두 이룩한 유일(唯一)한 사례임. 참고로 나머지 한 국가는 일본임.
- 현실적으로 미국 역시 한국이라는 성공 모델이 필요한 상황임.

II. 트럼프 행정부 2기 대외 정책 전망

1. 트럼프즘의 강화와 대외 정책 투입 자원

- 집권 2에 대한 다양한 전망, 1) 트럼프즘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 2) 대통령을 경험한 입장에서 제도적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공존. 현재 진행되는 주요 외교안보 담당 인선을 보면, 트럼프즘이 훨씬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 백악관은 물론 상하원 모두를 공화당이 장악했고, 지금까지 공화당 내부에서 온건파(공화당 연구위원회 모임 소속) 역할을 담당하던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 지원 세력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매우 큼.
- 미국이 외교 안보에 투입할 수 있는 정책 자산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급격히 줄어들었고, 이때 들어선 오바마 행정부는 진보 성향이 강한 정책 어젠다에 정책 자산을 대거 투입함으로써, 외교안보 문제에(특히 중국의 부상)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물론, '아시아 재균형 정책(Re-balancing Asia)'를 내세우면서, 중동 지역에 과도하게 투입된 정책 자원을 이동시키려고 했지만, 경제 침체로 인해 효율적인 자원 재분배 효과를 거두지 못했음.
-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이런 배경 위에 있고, 이번 선거에서 일반 투표까지 승리했기 때문에, 외교정책을 거래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트럼프즘'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2. 미중 전략 갈등과 대중국 정책

- 미국 기업은 물론 동맹 국가의 대 중국 투자 금지, 중국 상품을 대상으로 한 추가 관세 부가,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미국 내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 등을 핵심으로 하는 트럼프 당선자의 정책은 현실적으로 미국 유권자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음. 이번 선거에서 소위 러스트 벨트(rust belt)를 석권한 결과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고 있음.
- 현재처럼 세계화 현상이 복잡하게 서로 얽혀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전략이 가능할지, 또한 가능하더라도 그 피해 중 상당 부분은 미국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성공을 거둘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제기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및 주변 인사들은 지금이야말로 공세적인 대중국 정책을 통해, 1) 미중 무역 관계에서 발생하는 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2) 나아가 중국의 세계적 영향력 확장을 차단할 기회라고 믿고 있음. 여기에는 미국 일반 국민의 강력한 요구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이 현재 처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전반적인 국력 확장이 주춤거리는 시기라는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

3. 러우 전쟁과 관련 문제들

-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안보 질서 재편이라는 성격을 가지지만, 1) 이 전쟁을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 2)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 그리고 3) 유럽의 안보(NATO)가 동아시아 안보(인도태평양 전략)와 연결되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1) 중국-러시아 관계는 역사적으로 친소 관계가 다양하게 변화해 온 특징이 있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경쟁으로 인해, 유럽 안보에 충분한 자원을 투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러시아의 판단이 전제가 되기도 했음.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중국 및 러시아 모두와 대결 국면에 직면해야 하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더욱 강하게 가지고 있음.
- 2) 북한이 전쟁 참여는 기본적으로, 국가 차원의 참여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국제전 성격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전투병 파병이라는 다소 제한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파병이 국제적 비난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뜻은 아님.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의 참여 및 전투능력 정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1) 종전 협상이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만들어, 트럼프 의중대로 종전이 가능한 빨리 이뤄질 수도 있고, 2) 혹은 종전 과정에서 북한 참여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는 외교적 부담을 떠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더 난처하게 만들지, 3) 혹은 향후 러시아가 북한을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진영에 적극 초대하는 등, 북한의 전반적인 외교력 향상으로 이어지게 될 지, 관련한 다양한 전망이 가능한 상황임.

III. 트럼프 2.0과 한미동맹

1. 한미중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

-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중 관계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1)한국이 한미동맹을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자산으로 삼는다는 국가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2) 동맹 파트너 국가로서 비용 부담을 포함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신뢰를 보이는 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취할 수 있는 정책적 자율성 확보를 문제시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오히려 이러한 문제는 한국 사회 내부에서 스스로 논쟁을 야기

할 개연성이 더 크다고 봄.

- 따라서 오히려 차기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한미중 정책협의회(2+2 형식)” 같은 삼국 간 외교안보 논의의 장 출범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다자주의에 관심이 없는 입장이라, ‘한미중’과 같은 3자 논의 자체에 관심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 “2+2” 방식을 취하고, 주제를 한반도 문제에 한정하는 형식을 취한다면, 미국을 적극 설득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중국을 적극 설득하는 노력을 시도할 가치가 있음.

2. 북한 문제

-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가장 많이 논의 되고 있는 부분은 “과연 북미 정상 간 담판이 또다시 이뤄질 것인가” 하는 문제임. 일단 현 시점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2019년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특히 북한의 사정이 너무도 많이 변했다는 점인데 즉, 북한 핵무력의 고도화가 매우 적극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임. 여기에 만에 하나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대가로, 다탄두 미사일 역량 및 핵잠수함 능력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향후에 발생하는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너무도 커 보임.
-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면서까지 김정은과의 담판을 시도할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특히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최우선 외교안보 과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및 중동 사태 해결을 꼽고 있기 때문에, 만약 러시아 문제 해결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북한과의 협상을 절대로 서두를 이유가 없어 보임.
- 북한 역시 이 정도의 전략적 계산은 충분히 할 것이고,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와 불필요한 마찰은 피하면서, 핵무력 완성도를 높이고 경제성과와 같은 자생력 확보에 적극 주력할 것으로 보임. 한 마디로, 북한은 스스로 먼저 미국을 자극하기 전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어젠다화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향후 4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 2기는 본인들의 입장에서 매우 우호적인 외교안보 환경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한편,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두 개 국가 논리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러시아 참전을 계기로 북한은 외교적 공간을 넓히려고 시도할 수 있음. 특히 ‘글로벌 사우스’ 참가 등을 통해 한국과 별개의 국가라는 논리로, 국제사회의 다른 국가들이 북한을 외교적으로 수용하는 데에 부담이 없도록 만들고자 할 것임. 물론 과거의 사례로 볼 때, 북한이 국제무대에 나서는 일에 큰 관심을 가지지는 않겠지만, 만약 ‘글로벌

사우스'와 같은 기회를 통해 북한 경제에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임.

3. 한미동맹 및 주한 미군

- 일단 한미동맹에 대한 비용 증가는 당연해 보임. 최근 양국이 합의한 SMA(한미방위비 협상) 결과도 당연히 파기 될 수 있음.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인상 요구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 당연히 한미연합훈련 축소,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의 취소 등의 조치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주한미군 감축으로까지 이어질지는 판단하기 어려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담판을 다시 한 번 희망하고, 김정은 역시 긍정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한반도 평화를 전제로 주한미군 일부 감축을 논의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함.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이 전개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너무 많은 것이 사실임.

4. 한미일 협력

-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에 크게 동감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한미일 협력이 가지고 있는 대중국 대응이라는 부분은 인정할 가능성이 큼. 한국 및 일본 정부가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한,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일정 부분 정책적 가치를 인정할 것임.
- 한국 정부는 한미일 협력의 최초 취지에서 밝혔듯이, 안보협력 차원을 넘어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고 민주주의 연대라는 차원, 그래서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리더십을 따르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이러한 효과는 미국에게 더 큰 경제적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부분을 설명할 필요가 있음.

5. 유럽과 동아시아 안보의 연결:

- 한미동맹 관련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정책 이슈는, 인태전략 안에서 작동하는 대부분의 소다자주의(minilateralism)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특히 유럽 안보와 동아시아 안보의 연결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유럽과 동아시아가 안보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나토와 인태가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전후 질서에서 유럽에서는 안보 다자동맹(주의)를 구축하고, 동아시아에서는 안보 양자동맹을 구축했던 미국이, 약 80년 만에 동아시아도 안보다자주의를 안착시킬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인지가 문제인데, 특히 이 사안은 정책적 이슈이기

도 하지만, 동시에 학문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유럽-동아시아 안보 연결 문제는, 한국 정부의 친 나토적인 글로벌 안보 접근법과 연동되어, 향후 우리 정부의 정책 스탠스에도 중요한 사안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관련하여 지난 4월 ‘미국-일본-필리핀’ 사이에 체결된 ‘삼국안보협력’은 동아시아 안보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삼국협력을 어떤 수준에서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미-일-필 협력에 이어서, 만에 하나 ‘한미일 협력’에 동일한 협력 매커니즘 적용을 시도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이슈로 판단됨.

[현안 정책토론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 및 통상외교 강화방안

트럼프 2기 출범 평가와 대응 방향

조 한 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트럼프 2기 출범 평가와 대응 방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1. 트럼프 2기 출범 평가

-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각국은 진영논리가 실질적 각자도생의 길을 지향
-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전쟁과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세계질서는 자리를 못 잡고 다극화와 무극화 경향을 지속
 - 냉전적 대립 속에 숨어있던 갈등이 도처에서 현재화하고 있지만 UN 안보리는 식물화, 강대국들은 한계를 노정
 - 글로벌 정세 위기 속에 각국의 우경화 경향이 가속화
 - 미국은 국제주의와 고립주의를 오가는 외교노선의 혼돈 속 지도력이 약화
 - 러·우전쟁 여파로 구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는 국제적 위상을 상실하고 있으며, G2 국가 중국은 조기 '중진국 함정'에 직면
-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외교노선은 미국 국익 실현이라는 점에서 공통분모
 - 바이든 정부는 동맹과 네트워크를 강화해 미국의 안보비용 감소를 도모
 - 트럼프 정부는 동맹에게 안보비용을 직접적으로 요구
- 동맹과 네트워크를 중시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국제주의와 달리 고립주의 성향의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은 일정한 방향 전환을 예고

2. 트럼프 2기 대외정책 기조

-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 '미국우선 대외정책 (America First Foreign Policy)'을 공세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
 - 캠페인 슬로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경험을 토대로 주요 정책 성과 달성 도모 개연성
- '전략적 선택과 집중' 및 '거래 중심적 동맹관'의 강화를 통해 보다 공세적으로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이익을 담보하고자 할 것으로 전망
 - 트럼프 캠프의 외교·안보 재선 캠페인 슬로건은 '세계화의 거부와 애국심의 포용(Reject Globalism and Embrace Patriotism)'

- 세계경찰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신 국제무대에서 자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추구할 개연성
- 트럼프의 동맹관은 기본적으로 미국 우선주의에 바탕을 두고 거래와 비용의 관점에서 동맹의 효용성을 인식
 -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동맹의 효용성을 인정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동맹의 무용론이나 동맹 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할 가능성
-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동맹 무시와 자국 우선의 거친 행보는 많은 부작용을 초래며, 재선 실패요인였다는 점에서 2기 국정운영에 반영될 개연성
 - 세련된 방식의 고립주의적 대외정책을 추구할 경우 1기에 비해 국제정세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을 개연성
 - 트럼프 1기 행정부를 경험한 국제사회의 학습효과 고려

3. 지역별 영향

가. 한미관계

- 한미동맹의 내구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중국 견제 및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한미 간 안보·경제·기술·에너지 협력의 필요성은 트럼프 2기도 공감할 개연성
- 트럼프의 '거래 중심적 동맹관'과 '미국 우선 통상정책 2.0'에 기초한 공세적인 한미 관계가 재현될 가능성
 - 방위비 분담금, 한미 연합군사 훈련,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동맹 운용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정치적 말폭탄'으로 재등장할 개연성
- '보편적인 기준 관세'와 '트럼프 상호 무역법' 등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한 축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
 - 동맹과 비동맹의 구분이 없을 것이며, 대미 무역 흑자국인 한국의 대미 수출 관련 무역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나. 북미관계

- 북미 간 정상외교가 재활성화로 교착 상태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
 - 정상외교 활성화로 양국 간 교착 상태를 해소하는 방안이 모색될 가능성
- 북한은 미국 대선 캠페인 기간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정상각도 발사와 같

은 대미 전략적 도발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

- 미국 대선 전 북한은 우리농축시설, ICBM 기지, 화성-19형 ICBM 발사를 통해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협상을 압박
- 트럼프 재선 캠페인 당시 김위원장과 우호적인 관계를 여러 번 강조
- 최근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북핵을 사실상 용인하는 현실론적 북핵 협상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
 - “비핵화를 향한 중간단계(interim stage)도 고려할 용의가 있다”(미라 랩 후퍼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보좌관, 2024.3.4.)
 -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 된 2006년 뒤로 국제사회 관여가 없었다. 그 뒤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크게 확장됐다...서로의 과거를 언급하지 않기로 하는 방향으로 진지하게 고려해 보기 시작해야 한다”(그로시IAEA 사무총장, 2024.9.27.)
 -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비핵화 용어 누락(2024.10.30.)
-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현실론적 북핵 협상론을 활용해 ‘하노이 시즌 2’형 핵군축론을 지향하는 것으로 평가
 -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은 대북제재 일부 해제(5개)와 영변핵단지(북핵 프로그램의 일부)를 교환하는 실질적 핵군축론에 해당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당시 남북미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모호한 목표를 설정하고 사실상 핵군축을 시도했던 것으로 평가
- 트럼프-김정은 간 탑다운 방식의 하노이 시즌 2 타결 개연성 상존
 - 유엔안보리의 식물화 및 중리의용인 개연성
 - IAEA 등 국제사회의 묵인 개연성
 - 한국의 북핵위협 노출 우려 개연성
 - 국내 자체 핵무장론지지 여론 확대 및 한미동맹 회의론 제기 개연성
- 과거 북한은 한국을 경유해 미국과의 대화를 시도, 현재 ‘적대적 2국가론’ 선언으로 인해 한국을 통해 미국과 연결할 수 없는 상황
 - 미북 직접 대화 타진, 러시아, 일본 등을 경유한 우회적 대화 타진 등 어느 경우든 미북 대화에서 한국의 역할에 근본적 제약 발생 개연성
- 1기와 달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서두를 필요성이 감소
 - 러우전쟁, 중동사태 등 북한 문제가 후순위로 밀린 상황
 - 지난 북-미 정상회담은 재선 및 국내정치 위기에서 트럼프가 북한 카드를 활용했던 측면
 - 트럼프 2기는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상황

-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배제하고 북·미 직접 대화를 진행하며 한국정부를 다루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도 상존

다. 나토 및 러우전쟁 관계

- 나토의 유럽 동맹국들은 트럼프의 거래적, 고립주의적 성향, 그리고 분열적 지도력으로 인해 현재의 대서양 관계가 도전에 직면할 것을 우려
 - 발트 지역과 중유럽 국가들, 그리고 독일의 정책 결정자들과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입장은 트럼프의 공격적 언사는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않고 외교, 안보, 경제, 기후 정책 등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
- 트럼프 2기에서도 지난 트럼프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나토 방위비 분담금과 나토 개혁 문제를 놓고 미국과 유럽국 간에 동맹 갈등이 재점화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는 2025년 6월 제35차 헤이그 나토 정상회담을 계기로 구체화 될 가능성
-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트럼프의 인식은 전쟁의 조기 종식
 - 우크라이나에 대한 물질·군사적 지원 등의 축소 등을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하여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을 도출해내고자 할 가능성
 - 러시아에는 공세 중단을 요청, 푸틴이 원하는 현 상황에서의 휴전을 견인해 낼 개연성 상존
- 나토는 지난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의 당선에 대비하여 우크라이나 군대의 훈련과 지원을 제도화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조기 종전 구상은 나토에서 또 다른 동맹 갈등의 씨앗으로 작용할 개연성
- 트럼프가 재집권함에 따라 미국은 나토의 유럽 동맹국에 방위비용의 증액과 유럽 안보에 대한 더 큰 책임과 역할 분담을 촉구할 가능성
 - 미국과 나토 관계가 구조적 변화를 겪을 가능성 희박, 바이든 정부와 달리 여러 분야에서 불협화음은 불가피할 전망

4. 대응 방향

■ 국익우선의 전략적 명확성

- 국익에 기반을 둔 전략적 명확성 견지
 - 한국이 지향하는 국익과 가치를 명료화, 외교안보 전략적 명확성을 기준으로 현안에 대응
 - 상호 호혜적인 동맹관계의 효용성 확인, 동맹만능주의 경직성 해고

■ 평화통일 드라이브

- 대한민국, 한반도 유일 평화통일, 민족 적통, 정통 국가 위상 정립
 - 북한 2국가론은 남북 체제경쟁 및 통일경쟁 패배를 의미
 - 김정은 정권의 반역사적인 반통일, 반민족 인식 공략

- 헌법과 보편가치에 기반을 둔 통일 지향
 -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인류애와 동포애의 구현, 자유, 민주, 평화, 인권의 구현

■ 북한 변화 유도

- 북한 내 변화를 견인하기 위한 중장기적 노력 배가
 - 독재와 권위주의체제의 변화는 중장기적 차원의 변화를 요구

- 북한 주민과 북한 당국의 분리
 - 북한 정권을 통일로 견인, 중장기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의 신뢰를 형성
 - 북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개선 & 고통경감 정책 지속
 - 통일 협력 대상, 미래 통일 한반도 구성원 북한 주민에 대한 정책 강화

■ 능동적 자주국방

- 자체 억제 역량 & 확장억제 강화
 -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핵추진잠수함 등 실현 가능한 대안 고려
 - 확장억제 신뢰성 제고: 핵협의체(NCG)의내실화

- ‘핵군축론 뉴노멀’ 현실화 경향 방지

- 한국 자체 대안 마련
 - 1) 자체 핵무장
 - 2) 전술핵반입
 - 3) 농축 및 재처리권한 확보를 통한 잠재적 핵역량구축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 유사시 대비 체계 구축
핵추진잠수함확보 고려

■ 한국형 세계 전략

- 글로벌 중추국가, 세계국가 대한민국의 전략 모색
 - 인태시대 대응체제 형성
 - 남북관계 프리즘을 통한 외교의 한계 극복
 - 남북관계+국가발전+외교를 융합한 종합전략 모색

- 북방공간 관리
 - 러우전쟁의 한반도 전이 가능성 방지 및 러우 군사협력 억제
 - 러시아의 '강요된 선택'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상황을 관리
 - 러시아가 레드라인을넘지 않게 공식, 비공식 소통을 강화

[현안 정책토론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 및 통상외교 강화방안

미국 대선 이후 한미동맹 및 경제외교 강화방안

김진동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미국 대선 이후 한미동맹 및 경제외교 강화 방안

김진동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 본 발제문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발제자의 개인 견해를 밝힙니다.

1. 트럼프 2기 경제분야 핵심 공약

- **(무역·관세)** ▲ 무역 균형 추구 및 전략적 독립성 수호 ▲ 보편적 기본관세(10%~20%) 및 ▲ 상호관세 도입
- **(對中)** ▲ 최혜국대우(MFN) 취소 ▲ 중국산 필수재 수입 점진 폐지(phase out) ▲ 중 국의 美 부동산, 기업 등 자산 취득 금지 ▲ 美 국의 부합시에만 對中 투자 허용
- **(산업)** ▲ 국가안보 및 경제 안정을 위한 핵심 공급망 미국 복귀 ▲ 일자리 해외 아웃소싱 기업 규제 강화 ▲ 미국산 구매요건 강화 ▲ 가상화폐, AI, 우주산업 혁신
- **(에너지)** ▲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정책(EV mandate) 폐지 ▲ 사회주의적 그린 뉴딜 종료 ▲ 석유, 가스 및 원자력 생산 증대 ▲ 파리협정 탈퇴
- **(재정·통화)** ▲ 인플레이션 종식, 전방위적 물가 안정화 ▲ 트럼프 1기 감세법("25년말 만료 예정) 영구화 ▲ 불필요한 재정 지출 억제 ▲ 팁(tip)에 대한 세금 면제
- **(이민)** ▲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 능력 기반 이민자 수용 ▲ 부모 중 1명이 美 국적 /영주권 보유 시에만 미국 출생 자녀에 시민권 부여 ▲ 국경 장벽 완공 등 통제 강화

2.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추진 환경

- **(총평)** 대통령·양원 모두 승리 → 강력한 美 우선주의 추진 토대
- **(백악관)** ▲ 1기 경험 ▲ 4년간 준비 ▲ 국민의 강한 위임·지지 인식 ▲ 재선 부담 無 → 임 기 초기부터 신속·효과적 공약 이행 예상
- **(행정부)**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직업관료 교체로 장악력 제고 계획
 -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 역할?

○ (의회) 양원 확보 및 공화당 내 트럼프 지지 공고화

〈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 선출 결과 〉

	상 원	하 원
의장	J.D. 밴스 부통령	마이크 존슨(루이지애나/5선)
원내대표	존 튜(사우스다코타 3선) 現 원내총무	스티브 스칼리스(루이지애나/10선) 現 원내대표
원내총무	존 바라쏘(와이오밍/3선) 現 의원총회 의장	툼 에머(미네소타/6선) 現 원내총무
의원총회 의장	툼 코튼(아칸소/재선)	리사 맥클레인(미시간/3선)

○ (사법부) 임기 중 대법관 신규 임명시 보수화 경향 심화

○ (대중) 정치적 양극화 심화로 중도적 정책 추진 필요성 감소

□ (인선) 속도감 + 의외성 + 선명성

○ (속도감) 승리 후 10여일 만에 백악관 및 주요 내각 인사 대부분 내정 → 트럼프 1기는 물론 바이든 행정부*보다도 빠른 측면

* 트럼프 1기, '16.12월 국무장관, 국방장관 내정자 발표

바이든, '20.11.23 국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외교안보 6개 직위 내정 발표

○ (의외성) 그동안 주요 직위 하마평에 오르지 않았던 인물 발탁

○ (선명성) 충성심과 트럼프 철학·비전에 대한 강력한 지지

☞ 인선에 대한 상원 인준 여부가 2기 국정동력 확보에 중요

3. 트럼프 2기 우리 경제 환경

□ (전반적 환경) 미중 간 전략 경쟁 및 각 지역별 불확실성 지속 전망

○ 현재 미국 내 對中 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 공감대 존재 → 트럼프 1기 및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어져 트럼프 2기까지 지속 전망

- 특히 미-중 상호 간 전략적 독립(strategic independence)을 추구하면서 공급망 재편시 우리 경제가 단기간 내 조정 어려움

○ 미중 간 트럼프 1기 무역협상 타결(2020년 1월)과 같은 타협 시도 가능

- 이 경우 對中 조치의 범위와 강도 변화에 주목 필요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지역 분쟁 동향 변화 가능성
 - 긴장 완화 시 공급망 불안정성 약화 기대
- (한미 경제 관계) 트럼프 당선인 선거 공약이 실제 이행되는 범위·수준에 따라 다른 영향 불가피
- (교역)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 / 부과시 관세율과 범위
 - 중국 등 제3국에 대한 관세 부과의 영향
- (투자) IRA 및 반도체과학법 상 對美 투자 인센티브 유지 여부
 - 트럼프 행정부, 의회, 투자 지역 주 입장
 - 트럼프 행정부 중시 분야 신규 투자
- (공급망) 핵심광물(배터리, 반도체) / 첨단기술(AI, 쿼텀, 바이오)
 - 트럼프 2기의 정책 방향 및 중국의 대응 수준·범위
 - 한미 협력 및 소다자 협력

4. 한미동맹 강화 방안 (경제 중심)

【평가】

- (동맹 발전 추세) 내년 한미동맹 72주년(트럼프 2기 마지막 해 75주년) / 많은 도전과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계속 발전·강화 중
-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력, 5위권 군사력 보유 → 한미동맹은 안보를 넘어 경제·산업·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되며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
- (동맹 발전 여건) 한미동맹의 발전 추세 지속에 유리한 측면
-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당선인 포함 공화당 내 폭넓은 지지
- 한미일, 쿼드(QUAD) 등 트럼프 1기가 추진했던 소다자 협력의 제도화가 심화되어 동맹 강화에 우호적인 대외 여건이 조성
- 트럼프 당선인의 대외정책 방향(우방국의 역할 확대와 안보 기여 중시)과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 일맥상통

-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양국은 인식 유사, 이익의 조화 발전 가능
 - 즉, 지정학적 불확실성하 ▲공급망 다변화 및 복원력 강화 ▲첨단기술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호 협력 필요성 공감
- ➔ 첨단 분야 대미 투자 확대로 양국 공급망 이미 긴밀히 연결

【동맹 강화 방안】(경제 중심)

- (기본 방향) 정부 간 긴밀한 소통·협의를 진행하면서 동맹의 중요 기반인 양국 민간 분야 간 교류·협력의 폭과 깊이 심화 추진
- (정상) 정상외교를 통한 한미 정상 간 긴밀한 관계 및 신뢰 구축
- (행정부) ▲주요 입각 가능 인사 대상 적극적인 아웃리치 ▲추가 협력 분야 발굴 ▲투자·무역 측면 우리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메시지) 한국은 신뢰 가능한 호혜적 파트너, 양국 간 상호 직접투자 확대 등 한미 경제 관계 발전은 양국 모두에게 win-win임을 강조
 - (투자·산업)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분야에서 한미 간 성공적인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 등 신규 협력 분야 발굴·확대
 - (교역) 미국 외 아세안, 중동, EU 등 수출확대 및 시장 다변화 지원
 - ※ '23년 우리 수출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8.3%로 최근 20년간 최고 수준
 - (공급망)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등 관련 양자·소다자 협력 지속 활성화 노력 / 유사 입장국들과 정보 공유 등 위한 소통 강화
- (의회) 美 대내정책 관련 의회 역할 핵심 ➔ 對의회 외교 강화 필요
 - 우리 기업 진출 州를 대표하는 공화당 상하원 의원 아웃리치
 - 한국계 의원 등 활용 친한파 의원 저변 확대
- (민간) 우리 대미 진출 기업의 적극적 역할 중요
 - 美 정부·의회·기업 대상 활발한 네트워킹
 - 투자州 지역공동체 대상 CSR 활동

5. 경제외교 강화 방안

- (방향) 최근 경제-안보 이슈 융합 경향 ➔ 안보 및 경제적 측면의 국익을 함께 고려하는 경제안보 정책 중요

- 외교부 경제안보외교과('24.5월), 경제안보외교센터('22.5월) 신설
- 전 세계 171개 재외공관 네트워크 활용
- (종합분석) 각국 정치-경제-안보 정책 동향에 대한 종합적 분석 간요
 - 주요국 공관 경제안보 담당관 25명
- (현지 맞춤형 기업 지원) 각국 상주 대사관·총영사관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 맞춤형 지원 중요 → 재외공관을 수출·수주 전진기지화
- (국제 공조 강화) 유사입장국 간 분석 공유 및 대응 공조 필요
 - WTO 약화 및 전 세계적 보호주의 경향 심화 추세 가운데 유사 입장국 간 공조 필요성 더욱 강화
 - 주요 현안별 유사입장국을 조기 식별하여 공동 대응 / 소다자·다자 협력체 지속 활성화 노력. 끝.

[현안 정책토론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 및 통상외교 강화방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통상외교 대응방안

이 효 영

(국립외교원 교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통상외교 대응방안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

1. 트럼프의 귀환과 관세 정책의 부활

11월 6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다시 한번 ‘트럼프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여러 면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다른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미국의 통상정책은 중국 뿐 아니라 동맹국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수입 관세를 중요한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하에서도 ‘상호주의(reciprocity)’를 외치던 미국의 무역당국은 미국만큼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관세를 대폭 높여 더 이상 미국에게 불리하지 않은 국제통상환경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관세 카드를 활용하여 수입장벽을 높여 외국 기업들이 미국을 대상으로 상품을 팔고자 하는 경우 미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구축하여 상품을 팔도록 하고 이를 통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추구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더욱 강력한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중국에 대해서는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인 6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 most-favored-nation treatment)’ 및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를 철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중국에 대하여 60% 수준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통상 관계 단절을 의미할 만큼의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를 도입할지 여부는 지켜보아야겠지만 우선 이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도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자국 경제에 큰 피해를 주게 될 무역 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미-중 간 양자 협상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가 주도하는 미국이 중국에 대하여 원하는 ‘최종상황(end state)’이 무엇인지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어느 정도까지 추진될지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유세 과정에서 모든 무역상대국에 대하여 10~20%의 ‘보편적(universal)’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실제로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는 차치하고 미국은 자국의 거대한 시장을 등에 업고 관세 위협을 통해 무역상대국들로부터 상당한 양보를 확보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과 예측불가능성으로 인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면 미국은 자국 경제에게도 피해가 돌아가는 고율의 관세 조치를 도입하지 않아도 실제로 관세를 부과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보편 관세는 모든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전반적인 수출 가격의 인상을

야기할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에게만 차별적인 조치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기업과 수출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한 트럼프의 보편 관세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 목표를 고려하면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협상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는 미국의 정책 방향에 공조하기 위해 우리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 증대 및 부품과 중간재의 수출 증가가 발생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해당 수출 증대 부분에 대해서는 대미 무역규모에서 면제 등 최대한 고려가 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2.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속 공급망 재편 및 산업보조금 정책 보완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의 對(대)중국 정책은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와 같은 중국에 대한 강경한 대응이 미국 기업에게만 한정되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의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은 미국 기업 뿐 아니라 외국 기업을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국내법의 역외적용을 통해 수출통제 등 기술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외국 기업에게도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특정한 첨단 및 신흥 기술에만 국한되어 적용되던 수출통제 조치가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는 적용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현지에 저사양 ‘레거시’ 반도체 생산시설과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우리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수출통제 적용대상의 확대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우려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중국이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시키는 것도 염두에 두며 전략적인 분야의 제조 산업을 미국 내에 구축하고자 하는 ‘Make in America’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 산업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의 일환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출통제 조치를 ‘다자화(multilateralize)’하고 이를 위해 동맹국의 동참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산업 보조금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는 미국의 현지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약속하였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환영하지 않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의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에 따라 지급되는 외국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미국에서 생산된 중간재 및 부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국내산 사용 요건(local content requirement)’을 강화시켜 산업보조금과 ‘Buy America’ 정책을 연계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보조금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에 대하여 트럼프 당선자는 공화당 정책정강(party platform)을 통해 미국의 소비자와 산업의 비용을 증대시키는 규제 정책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의 상당 부분이 공화당 지역구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IRA 보조금의 전면적 폐기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반도체과학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외국기업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축소하기 위해 미국 내에서의 '국내산 사용 요건(LCR)'을 강화하며 보조금 혜택을 자국민과 자국기업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3. '트럼프 2.0 시대'의 국제통상환경 전망과 우리의 통상외교 대응방안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에 따라 국제통상환경은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한 층 더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도입되었던 여러 입법 및 행정 조치에 대하여 나름 적응을 하면서 대응을 해왔던 주요 무역대상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끌게 될 미국의 통상 정책 방향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통상정책 방향은 이미 바이든 행정부 이후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선 상황이다. 문제는 '트럼프 2.0 시대' 미국의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국제통상환경을 더욱 위축시키고 더 나아가 세계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이다. 주로 중국을 대상으로 했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트럼프의 귀환 이후 더 이상 중국만을 겨냥하지 않고 전 세계의 미국 무역상대국을 상대로 점진적이지만 노골적으로 공격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행보를 좌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취임을 앞두고 우리 정부와 업계는 부지런히 그러나 체계적으로 미국 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사전협의 노력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의 국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는 공화당이 미 의회의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곧 트럼프 행정부의 입법화 노력들이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미 의회가 미 행정부의 일방주의적인 조치들의 도입과 실행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 의회를 대상으로 정부 차원의 사전 협의 및 업계 차원의 로비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미 행정부 차원에서 도입되는 조치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통상정책은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보호무역주의를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정책은 향후 세계 경제를 지역 및 대륙 중심으로 분절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여 각국에서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세계 경제의 성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으며, 각 지역 또는 대륙을 중심으로 경제활동 및 공급망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에서 규범 기반(rules-based) 국제경제질서를 지지하는 국가들 간 역내 연대와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한동안

잇혀졌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CPTPP)’ 협정의 가입 문제를 재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주요 역외 지역 및 대륙과의 통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기업의 기술 및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주요국의 전략적 핵심 산업에 대한 상호경쟁적인 보조금 지원 정책을 통해 상대적 경쟁우위 확보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는 기술육성 정책과 함께 적절한 기술보호 정책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기술 유출에 따른 국가안보 리스크 대응 및 국내 산업 경쟁력의 보호 대책도 필요할 것이다.

토론회 자료집 내용은 발표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민의힘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